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의 유형 분석 및 향후과제 -구성요건 및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변호사

1. 들어가며

과거 스토킹은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에 대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기존에 스토킹을 바라보는 시각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혹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 다니는 행위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른바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¹⁾에서 알 수 있듯이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 밖에도 2016년 전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²⁾, 2019년 여고생을 반년 넘게 스토킹하다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여고생과 주민을 살해한 ‘진

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³⁾ 등은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스토킹 행위로 인한 중한 범죄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1999년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이후, 2003년 ‘스토킹방지법안’과 2005년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범죄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대한 논란 등으로 번번이 폐기되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현행법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마침내 지난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⁴⁾ 여기에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개정법률안의 스토킹 행위의 처벌

1) 한겨레, “‘노원구 세모녀’ 큰딸 지인에 두려움 호소...스토킹 정황 문자 공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9216.html, 최종검색일 2021. 5. 26.
2) 여성신문, “가락동 스토킹 살해 재판장 ‘살인사건 중 가장 극악’”,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162>, 최종검색일 2021. 5. 26.
3) 연합뉴스, “[살인의 전조 스토킹] 스토킹 사건절반, 성폭력·폭행으로 이어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136900501?input=1179m>, 최종검색일 2021. 5. 26.

유형을 형사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10월 21일 시행을 앞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II. 스토킹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스토킹 관련 기본 개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스토킹 처벌에 관한 입법방식

스토킹 처벌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비교해 보면, 독일의 경우는 형법전에 일정한 유형을 열거하는 한편, ‘기타 이에 상응할 만한 행위’라는 보충적 규정을 함께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⁵⁾ 일본의 경우는 스토킹행위 등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⁶⁾ 반면 미국의 경우는 연방스토킹방지법(Federal Anti-Stalking Laws in 2014)은 ‘일련의 행위(course of conduct)’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포괄적인 규정방식을 두고 있고, 모델 스토킹방지법(Model Anti-Stalking Code)은 스토킹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⁷⁾

3. 21대 국회 스토킹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

스토킹 관련 법률안이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총 25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 중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각 법률안의 스토킹 정의 개념 내지 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입법방식 및 각 행위유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4. 20. [법률 제18083호, 2021. 10. 21. 시행]

5) 이승준, 「독일의 스토킹 처벌 규정의 개정과 그 시사점」,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122면.

6) 이성기, 「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법학논문집』 제42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286면

7) 이성기, 앞의 논문, 283면.

〈표 1〉 21대 국회 스토킹 관련 법률안과 주요 내용

연번	의안번호 · 의안명 (대표발의자)	스토킹 정의 · 행위 유형	법정형	비고
1	2100036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준숙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 • ①접근하거나 미행 ②주거지 · 근무지 ·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③전화 · 편지 · 모사전송기 · 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⑤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⑥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⑦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재범, 인적신뢰 관계,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로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보충적 구성요건
2	210005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①접근하거나 미행하는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지 · 근무지 · 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③우편 · 전화 · 모사전송기 · 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 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영상 · 사진 · 그림 등을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⑤<u>그 밖에 피해자나 가족 등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재범,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로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보충적 구성요건
3	21014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⑤⑥⑦행위, 스토킹재범,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 	

연번	의안번호 · 의안명 (대표발의자)	스토킹 정의 · 행위 유형	법정형	비고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④우편 · 전화 · 모사전송기 · 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⑤카메라나 그 밖에 디지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 ⑥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 ⑦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편집 · 합성 · 가공	<p>협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킹범죄로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4	2101738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 · 전화 · 모사전송기 · 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그 밖에 위 각 목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충적 구성요건
5	2103278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 · 전화 · 모사전송기 · 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그 밖에 위 각 목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상동	스토킹 정의에서 '지속적 · 반복적' 제외하고 상동
6	2104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서범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상동	

연번	의안번호 · 의안명 (대표발의자)	스토킹 정의 · 행위 유형	법정형	비고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 · 전화 · 모사전송기 · 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상대방의 동거인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신체, 생활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⑥그 밖에 위 각 목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7	21068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 · 전화 · 모사전송기 · 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동	행위 유형 한정적 열거
8	210706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상동	상동	행위 유형 한정적 열거
9	21083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혜영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①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 ②주거지 · 근무지 ·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③면회나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요구 ④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⑤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⑥전화 · 편지 · 모사전송기 · 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 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⑦카메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보호감독 대상 :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대상, 인적 신뢰관계/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협박 등 위협/ 흥기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재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11개의 구체적 행위 유형과 보충적 구성요건

연번	의안번호 · 의안명 (대표발의자)	스토킹 정의 · 행위 유형	법정형	비고
		그 밖에 디지털 기계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녹화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 등 ⑩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 ⑨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유포 ⑩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⑩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⑩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킹범죄로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0	21090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 유형 한정적 열거

그동안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률안을 보면,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2건⁸⁾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법률안은 ‘스토킹’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였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는 모두 스토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그대로 명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

고,⁹⁾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과 구별하기 위해서도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을 보면, 연번 9의 장혜영 의원안의 경우가 가장 많은 11개의 행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가결된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가장 많이 중첩되는 4가지 행위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① 접근하거나 따

8)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8. 발의, 의안번호 제173472호;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상화의원 대표발의), 2016. 10. 13. 발의, 의안번호 제2002641호

9) 정현미, 스토킹범죄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244면.

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성,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이다. 입법방식에 있어서도 연번 1, 2, 4, 5, 6, 9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 유형 외에도 보충적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독일의 입법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면서 별도의 포괄적인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과 관련하여서는, 최종적으로 가결된 법제사법위원회장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흉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 동일한 법정형 규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청소년 대상의 가중처벌,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결과적 가중범 등을 규정한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의 적정성을 보면, 형법상 유사한 보호법익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구류, 과료',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죄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¹⁰⁾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특성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 위험의 정도가 크고, 긴급체포와 같은 즉시적인 경찰권을 행사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죄 또는 협박죄와 비교하여 상회하거나 유사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Ⅲ. 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의 평가 및 향후 방향

2021년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토킹 관련 법률안이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만큼 해당 법률에 대한 관심과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법률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논의되었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지만, 법률 제정에 의의를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정해 가는 노력이 더해져야만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위 유형을 예시 내지 열거하면서 별도의 보충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보충적 구성요건 내지 일반규정을 두게 되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지나치게 처벌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¹¹⁾을

10) 이성기, 앞의 논문, 296면.

11) 장응현,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관한 연구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192면.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행위의 특성상 연속성과 점진성, 비약성 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제정 법률과 같이 행위를 쪼개서 예시 내지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처방안인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논의되는 법률안의 행위 유형과 경험적 현실(판결문 상의 행위)과는 차이가 있으며 스토킹 행위 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¹²⁾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위 내지 행위유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률 제정 이후에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스토킹에 대한 경험적 연

구 내지 판례를 바탕으로 한 행위 유형의 추가 개정 작업이나 시행령 등을 통한 구체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률에서 행위태양에 따른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스토킹행위가 동시에 다양한 범죄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첩적인 성격을 가지고, 행위 반복을 통해 일정한 목표 내지 중한 범죄로 발전해 나가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12) 한민경, 앞의 논문, 65-92면 참조.